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

[의안번호 2108523,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]

2021. 4

I. 개요

1. 개정안 주요 내용

- ☐ 초과이익공유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(류호정 의원안)이 국회 계류 중

<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 내용>

구분	주요내용
초과이익공유제	-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익 초과 달성 시 사전 계약에 따라 초과된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
중소기업 적합업종	-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중기부장관이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 - 중견·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 인수·개시 또는 확장 금지 -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

- ☐ 개정안은 대·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되며, 대·중견·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
- ☐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·수탁기업의 사업기회 상실·산업경쟁력 약화·기업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, 법제화보다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내실화를 통해 수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
- ☐ 생계형적합업종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과도한 중복규제로 장기간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

II. 세부 건의내용

1.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 : 반대

대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경우, 사전 계약에 따라 초과된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

- (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산정 불가) 위탁기업의 목표이익 설정 및 개별협력사 기여도 측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
 - 기업 이익은 금리, 환율 등 외부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며, 세계화 시대에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
 - 위탁기업별 협력사는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며,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협력사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
- (주주 재산권 침해) 초과이익공유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하락,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
 -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거나,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
 - 기업의 경영전략적 판단에 의해 투자, 배당 등으로 재분배되어야 할 이익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(자기부담 원칙에 위배) 손실은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 공유하는 것은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부담 원칙에 어긋남
 - 이익공유의 대표 사례인 롤스로이스社는 “위험-수익 공유파트너십” 체결을 통해 위·수탁기업이 수익 공유뿐만 아니라 비용을 함께 부담
 - 개정안은 위탁기업에서 발생한 이익만 협력사와 공유하도록 하여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

- (수탁기업의 사업기회 상실) 장기적으로 위탁기업과의 거래 축소로 인해 수탁기업의 사업기회 상실 및 경쟁력 약화 우려
 - 초과이익공유에 대한 부담은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직접생산 비중을 높이거나, 납품기업을 해외로 변경하게 할 수 있어 수탁기업과의 거래비중을 축소시킬 우려
 - 또한, 수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기업의 각종 지원 등이 축소될 수 있어 수탁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
- (산업경쟁력 약화) 초과이익공유제는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이며,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
 -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하고 있으나 정책지원 차별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강제력을 가진 제도로 운영될 소지가 큼
 - 초과이익공유제는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불리하게 하며, 성장 및 혁신 의지를 저해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
- (성과공유제 내실화)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기존 성과공유제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
 - 성과공유제는 '04년 포스코에서 최초로 실시했으며, '06년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'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후 확산
 - * (성과공유제)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·위탁기업 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·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제도
 - 성과공유제는 누적기준 '12년 77개사가 도입, 997개 과제를 통해 556개 수탁기업을 지원했으며, '20년 499개사(공공기관 213, 대기업 110, 중견·중소기업 176)가 19,923개 과제를 통해 10,548개 수탁기업을 지원
 - 따라서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 기존 성과공유제의 내실화를 통해 협력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

2.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: 반대

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중기부장관이 지정 여부 결정하며, 지정 시 중견·대기업의 사업 인수·개시 또는 확장 금지 →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□ (중복 과잉규제) 생계형 적합업종에 더해 중소기업 적합업종(이하, 적합업종) 법제화시 중복 과잉규제로 인해 중견기업의 성장 위축 초래

- 그간 적합업종은 대·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, 신청 업종은 325개, 합의·권고된 업종·품목은 121개로 그 중 60개 업종·품목이 현재 유지 중

* 적합업종 현황('21.3월 기준) : (신청접수) 325개, (진행 중) 1개, (합의·권고) 60개 (적합업종 6개, 시장감시 1개, 상생협약 53개), (해제) 61개, (철회·반려) 203개

- 현행 제도에서도 적합업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업조정 제도*를 통해 사실상 강제할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할 수 있음

* 합의 미도출 → 사업조정 신청 → 중기부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심의(일시정지 권고 가능, 미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) → 사업조정 권고·공표 → 이행명령 → 미이행시 벌칙(2년 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이하 벌금) 부과

-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('18.12월)으로 중견·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, 적합업종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장기간 시장참여를 제한*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위축 우려

* 적합업종 6년(3+3), 생계형 적합업종 5년(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해 영구 지정 가능)

□ (처벌만능주의 우려) 개정안은 중견·대기업의 시장참여 제한 강화 및 법적 처벌을 위한 입법으로 처벌만능주의가 우려됨

-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권고사항이지만 미이행시 동반위의 사실공표 및 중기부의 사업조정 등으로 중견·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사실상 불가
- 그간 중견·대기업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전수, 인력양성 등 자체 협력 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

-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처벌을 통해 상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처벌만능주의적 입법으로, 오히려 중견·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던 상생 활동 위축을 초래
- **(악용 우려)** 중소기업단체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여 중기부 심의를 통한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악용 우려
 -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 중심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으나, 중소기업단체가 중견·대기업의 시장참여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합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큼
- **(글로벌 경쟁력 약화)**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특정 업종·품목의 경쟁을 제한하여 개별 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초래
 -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시 사실상 중견·대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 개발이 불가하게 되며, 이는 해외진출의 기반이 되는 내수시장 활동을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
 - 글로벌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이 도태될 우려